

보도 설명자료

(’20. 7. 16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신재생에너지 지원금액 ’30년 8조 8,723억원은 기술발전에 따른 단가하락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추계한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음

(7.16일자 매일경제, “文정부 ‘신재생에너지 보조금’ 2.5배 급증”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RPS 의무이행에 따른 지원 금액 증가는 신·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주로 기인하며
- ◇ 기술발전에 따른 단가하락 등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 추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
- ◇ 7월 16일 매일경제 <文정부 ‘신재생에너지 보조금’ 2.5배 급증>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 내용

-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2조 6,344억원으로 ’30년 보조금을 용량과 비례해서 전망해보면 8조 8,723억원 육박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신재생에너지 지원금은 ’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(RPS)에 따라 신재생 발전량이 늘어나면 이에 상응하여 동반 상승하는 구조임

-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원금이 증가한 것은 신재생발전량이 크게 상승*(’17년 → ’20년 65% 증가)한 데에서 주로 기인

* 신재생발전량(폐기물 제외) : ’17. 20.2TWh → ’20, 36.5TWh

- '30년 보조금을 8조 8,723억원으로 전망한 것은 신·재생 기술발전에 따른 단가하락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, 발전량 대비 비용을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혀 합리적이지 않음
 - 실제 태양광 모듈 단가는 '10년 1.8\$/W에서 '20년 0.2\$/W 수준으로 하락했으며, 1MWh REC 현물가격도 '13년 153,524원 대비 '20년 42,766원으로 크게 하락하였음
 - 이러한 기술발전에 따른 단가하락을 반영하여 추계하는 것이 합리적임
 - 또한, '34년 RPS 의무이행비율(40%), 공급의무자 대상 확대(23→30곳)는 이미 시행중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,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할 사안임
 -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술발전과 경쟁을 통해 비용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임
- ※ 문의: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이재식 과장/강은구 사무관(044-203-5361)